

경기 불황 탓 '청년 취업' 사상 최저

지난달 광주지역 10만6천명 ... 1년 새 2천명 감소 미땅한 일자리 없어 취업 포기한 '백수' 급증 탓도

불황과 국내의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 들어 광주의 2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할만한 미땅한 일자리가 없어 전국적으로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활동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20대(20~29세) 취업자는 총 10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10만8천명)에 비해 1년새 2천명 감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05년(11만8천명)보다는 1만2천명이나 줄었다.

광주의 20대 취업자 감소는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교 및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대기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기 불황 속에 취업문턱마저 날로 높아지면서 사실상 '백수'로 지내는 청년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광주는 또 20대 초반(20~24세)의 취업자가 3만1천명까지 추락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천명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저치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9천명으로 1만명선 아래로 내려앉았으며, 여성도 2만2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 20대 취업자가 8만6천명까지 떨어져 3년새 4천명이나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황동이 크게 둔화됐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63.5%)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대의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은 사회 초년생들이 아예 직업을 갖지 않은 채 학생 신분으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은 취업 의지가 약하다기 보다는 구직에 나서야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준비를 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9월의 취업준비자 수는 59만7천명으로, 지난해 9월(53만6천명)보다 11.5%(6만2천명)나 늘었다.

하지만 취업준비자 가운데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취업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2.2%(5천명)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통학 취업준비생들은 1년새 17.9%(5만7천명)나 늘었다. 이는 학교 졸업 후에도 취업대기 상태에 머물면서 사실상 '백수'로 지내는 인구가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국 우수市場 박람회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여한 충남 광천 젓갈시장 점포에 관람객들이 몰려 각종 젓갈을 시식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다양한과 순천 남도김치 '파워브랜드' 은상

순천농협 남도김치와 다양한과가 '2008 농식품 파워브랜드' 전농식품 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또 고흥유자는 원예농산물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대통령령인 대상에는 전통식품 부문에 안동 풍산김치, 원예농산물 부문에 경북 의성마늘이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5회째인 올해 대회는 전국 시·군을 통해 추천받은 농식품 가운데 1~2차 평가를 통해 전농식품과 원예농산물 분야로 나눠 각각 8개의 우수브랜드를 선정했다.

1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이종대기자 jilee@

축산물 수입판매 허가제로 바뀐다 '가든형 식당' 닭·오리 도축 금지

지난 상반기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신고제였던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직접 닭·오리를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는 '가든형 식당'의 직접 도축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과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허가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이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에 참여할 수 있어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저급품 수입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광주축산농협 한우직매장 광산 신가동에 3호점 오픈 시중가보다 20~50% 싸

축산물 수입 개방 파고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이 16일 한우직매장 3호점을 개점, 개방위기 대응에 나섰다.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3호점은 남구 효천역점(1호)·북구 운정동점(2호)에 이은 것으로, 160평 규모의 공간에 직매장과 200석의 식당을 갖추고 있다. 3호점을 포함한 직매장은 한우 등심 600g에 1만4천원, 국거리리는 9천600원 등 일반 시중가보다 2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날 개점식은 500여명의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다짐의 날' 대회로 치러졌다.



안명수 조합장은 "유통구조를 대폭 축소해 농가에는 한우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소비자에는 값싸고 신뢰받는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추가로 직매장을 개설, 한우고기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을 연 1호점은 연매출 15억원에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오픈한 2호점은 2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中企 "생색내기용" 비난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주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소나비를 피해야겠다' 행동이라고 16일 비난했다.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는 2.7~3.5%로 대기업의 1.5~2.0%에 비해 지나치게 높는데 카드사들이 15일 발표한 인하수준(0.1~0.3%)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와 격차가 커 생색내기

불과하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신용카드로부터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의 편차를 최대 지나치게 높는데 카드사들이 15일 발표한 인하수준(0.1~0.3%)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와 격차가 커 생색내기

호남지역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많다

지난해 2천여건 58% ↑ ... 지방국세청 중 2위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 과표 노출 꺼려 기피

광주, 전남·북 지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세수확보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데다, 이들 자영업자들이 과표노출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는 2006년 1천322건에서 2007년 2천822건으로 57.5% 급증, 대전국세청에 이어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두번째였다.

같은 기간동안 대전국세청이 1천655건에서 2천846건으로 71.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광주국세청에 이어 대구국세청 1천448건→2천787건(43.5%), 서울국세청 4천926건→6천850건(39.1%), 충청남부국세청 5천287건→6천669건(32.6%), 부산지방청 3천162건→3천848건(21.7%) 순이었다.

한편 광주국세청 산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올 1~6월 7천567만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6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늘어난데다,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광주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시민 감시활동이 활성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발행액만 6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급 거부사례를 줄이기 위해 취약업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 발급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